

자료 활용

인권정보자료실  
CPb1.42

#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

2000년 10월~12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CPb1.42

자료 활용

#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

2000년 10월 ~ 12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차례

### 위원의 출범 관련 보도/3

- [사실] 의문의 죽음들 진실을 밝혀라 (한겨레 10.13)  
[기획] 권위주의시대 억울한 죽음 의혹 파헤친다 (한겨레 10.13)  
[인터뷰] "원혼 달래기 넘어 권력 반인권범죄 반드시 드러낼터" (한겨레 10.13)  
'의문사 규명위' 본격활동 (동아일보 10.17)  
의문死 의문문다 (조선일보 10.17)  
의문사진상규명위 첫 회의 (한겨레 10.17)  
[인터뷰] "처벌아닌 진실규명이 목적" (대한매일 10.18)  
[칼럼] 의문사 진상 밝히는 길 (대한매일 10.18)  
[인터뷰] "의문사 풀어야 歷史가 쉽다" (조선일보 10.18)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 [인터뷰] "처벌보단 진실 규명" (중앙일보 10.18)  
3선개선 이후 모든 의문死 대상 / [인터뷰] "진실규명 통한 화합에 초점" (한국일보 10.18)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노동일보 10.18)  
'의문사' 진상 규명 기대만큼 큰 우려 (국민일보 10.19)  
[사실] 의문사 규명의 역사적 당위 (한국일보 10.19)  
[사실] 의문死 진상위에 거는 기대 (조선일보 10.22)  
[기획] 자살이나 타살이나 의문死 풀리려나 (조선일보 10.24)  
[인터뷰] 은폐된 진실 밝혀내 어두운 과거사 청산 (평화신문 10.29)  
[칼럼] 의문死와 비뚤어진 권력 (중앙일보 11.14)  
Reprobe of Questionable Deaths Begins Amid High Expectations (Korea Times 10.17)

### 의문사 진정접수 관련 보도/25

- [사진] 민주화운동 국민연대 의문사사건 진상규명 촉구 (연합뉴스 11.23)  
의문사 5건 진상규명 진정서 접수 (연합뉴스 11.23)  
[사진] "의문사 규명하라" (문화일보 11.23)  
"5대 의문사 진상규명 해주오" (대한매일 11.24)  
"의문死 의문 밝혀라" 진정서 제출 (동아일보 11.24)  
"숨겨진 죽음 진실규명은 남겨진 이들이 갚아야 할 빚" (세계일보 11.24)  
의문사 5건 '규명 진정서' 접수 (조선일보 11.24)  
의문死 5건 규명 진정서 (중앙일보 11.24)  
[사진] "눈물을 닦아다오" (한겨레 11.24)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 5건 접수 (노동일보 11.24)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인권하루소식 11.24)  
[사실]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사건 (노동일보 11.25)  
Civic Groups Request Probes Into Five Suspicious Deaths (Korea Times 11.24)

### 조사관 임명식 관련 보도/41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임명, 본격 활동 (연합뉴스 12.1)  
'한지붕 두가족'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민일보 12.1)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49명 임명 (문화일보 12.1)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 (경향신문 12.2)  
"民-官 힘 모아 의문사 밝힐터" (동아일보 12.2)

[인터뷰] "의문사 규명은 열사들의 恨푸는 첫 단추" (문화일보 12.2)  
 의문사 규명 民·官 조사관 임명 / [인터뷰] 민간출신 사무국장 황인성씨 (중앙일보 12.2)  
 80년대 용기있던 전직경관 의문死진상위 자문위원회에 (한국일보 12.2)  
 의문사진상규명위 본격 활동 (노동일보 12.2)  
 '의문사 사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12.1)

### 기고 및 기타 관련 보도/59

[시론] 의문사규명은 역사적 소명 (세계일보 10.19)  
 [기고] '감춰진 죽음' 왜 밝히는가 (문화일보 10.30)  
 [논단] '피카르'를 기다리며 (한겨레 12.5)  
 [칼럼] 386원혼과 386의원 (한겨레 12.11)  
 "의문사 진상규명은 정부의 의무" (동아일보 10.22)  
 [기획] 친구야, 이제 알수 있을까? (한겨레 10.31)  
 "동지 의문사 진실 내손으로..." (한겨레 11.10)  
 파운더 교수 "법의학의 초점은 인권보호" (연합뉴스 12.7)  
 "의문사 진상 규명 법의학에 달려" (조선일보 12.8)  
 [인터뷰] "국민 참여로 제도한계 극복해야" (교수신문 10.23)  
 의문사,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12.5)  
 [인터뷰] "역사는 언젠가는 살아 숨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12.5)  
 [인터뷰] "억울한 죽음 밝혀내야 생명존중사회 가능" (월간 말 11월호)  
 [인터뷰] 이 사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양승규 교수 (월간 생활성서 12월호)

### 위원회의 및 의문사 관련 기획·연재 기사/79

[기획연재] 의문사 집중조명 (문화일보 10.16~10.30)

- (1) 민주화 밑거름 된 말없는 주검들
- (2) "유신반대 교수 조사받다 투신 자살"
- (3) 89년 공안정국 ... 의혹의 '운동권' 역사체
- (4) 반체제 학생 '녹화사업' 희생 속출
- (5) 병영서 나온 주검들에 '자살' 꼬리표
- (6) 실종된 대공수배자들 '불귀의 객'으로
- (7) 공권력 휩쓴 자리엔 '힘없는 이'의 죽음
- (8) 현대사 매듭 '남은 자'가 풀어야

[기획] 밝혀져야 할 의문의 죽음 (월간 참여사회 11월호)

- (1)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 (2) "저승에서 아들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
- (3) "형이 죽은 6월 15일엔 언제나 망월동에서..."
- (4) 민관합동조사 기대반 우려반

[기획연재] 의문사 이제는 밝히자 (오마이뉴스 10.18~12.7)

- (1) "외압 있으면 그들도 파헤칠 것"
- (2) "아버지는 간첩이 아닙니다"
- (3) "더 이상 힘이 없어 먼저 갑니다"
- (4) "생선장사 어미 앞잡아 보았더냐"
- (5) "죽을 것인가, 친구를 팔 것인가"

## 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

## 사설

### 의문의 죽음들 진실 밝히라

1969년 삼선개헌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해 숨졌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밝히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조사를 담당할 위원 9명이 1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이 422일간 국회앞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어렵게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이제 대장정의 막이 오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오늘에 이르렀다. 아직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지는 못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감금이나 고문 등의 일상적 가위눌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희생자들 중에서도 특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과 남은 가족의 고통은 가장 클 것이다. 군 당국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당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묻혀졌던 의문의 죽음들을 낱알이 드러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일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위원회가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조사대상으로 꼽히는 40여건의 사건 하나하나가 슬한 난제를 안고 있다. 워낙 오래 전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관련기관들이 진상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최대 9개월로 한정돼 있는데다, 수사권 아닌 '조사권'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해당 기관들이 관련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고 가해자 주위에서 적극 제보를 해주어야 비로소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가장 큰 힘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일 것이다.

# 권위주의 시대 억울한 죽음 의혹 파헤친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 17일 활동 들임

## 주요 의문사자 명단

	<b>최종길</b> 73.10.19(41) 서울대 법대 교수 중앙정보부 조사중 추방사
	<b>장만하</b> 75. 8.17(57) 제1지도자 유신철폐 투쟁 도중 의사병 아에서 주검발견
	<b>임기훈</b> 80. 7.26(58) 부산대학교 이사장 보안처 조사중 사망
	<b>정성희</b> 82. 7.23(20) 연세대생 군대 월북군무용 의문의 사망
	<b>우종원</b> 85.10.11(23) 서울대생 학생운동 관련 수배중 경주산 울도면에서 주검 발견
	<b>최우혁</b> 87. 9. 8(21) 서울대생 군복무중 부대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의문의 분신
	<b>박종근</b> 88. 8. 1(25) 중국대생 왕위명 투쟁중 동사무소에서 의문의 연사
	<b>이철규</b> 88. 5.10(24) 조선대생 보안법 수배도중 광주 철주 동 제4수원지에서 주검 발견
	<b>이내성</b> 89. 8.15(27) 중앙대생 거문도 앞바다에서 주검 발견
	<b>김홍길</b> 90. 3.28(24) 동우대생 학교민주화투쟁 도중 의무의 교통신고

국회가 12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9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지난 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된 지 석달 만에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오는 17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본격적 활동에 나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회복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으로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관계로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했다는 점에서 우리사의 민주화 여정도 확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그동안 은폐·왜곡된 진상을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 ■ 의혹 여전한 의문사 사례

유신과 80년대 신군부로 이어진 독재정권 치하, 수많은 생명이 강권과 폭압에 희생당했다.

하지만 그중엔 그 시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버린 억울한 죽음도 적지 않았다.

유신치하에선 박정희정권의 장기집권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야인사와 지식인들이 의문의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 최종길(사망 당시 41)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죽음은 유신체제가 빛어낸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다.

독일 뮌헨대 박사 출신인 최 교수는 73년 10월19일 당시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물건 중앙정보부으로 연행돼 '유압거점 간첩단'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도중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측은 "최 교수가 병행 사살을 자백한 뒤 투신자살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유신체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8월22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oo@hani.co.kr

## 서명·청원·국회발 천막농성

### 10여년 투쟁 성과물 역사 바로세우기 전기

## 조사권·기한 제한

### 진실 접근 순탄치 않음 "양심적 제보에 기대"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다른 어떤 특별기구보다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발족이 민주화 세력의 희생과 투쟁을 통한 아레로부터의 성과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법법은 135일이나 계속됐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의문사진상규명 촉구 농성(1988년 10월~1989년 3월), 의문사 진상제조사 촉구를 위한 10만여명 서명과 국회 청원(1994년 11월), 특별법 국회 청원(1998년 9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22일 동안의 국회 앞 천막농성(1998년 11월~1999년 12월30일) 등 10여년에 걸친 활동으로 맺은 결실이다.

위원회의 구성과제도 기대수준을 높여 주는 대목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정부는 유가협과 민변 등 특별법 입법과정을 이끌었던 주체들에게 위원회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인적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발족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제약들도 남아 앞으로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강력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 조사권한이 없다는 게 경우에 따라선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유가협 등은 애초 입법과정에서 위원

회에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으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자료요청권 등 제한적인 조사권한과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권만 부여해 결국 잡지 못하는 검찰측에서 위계됐다.

조사 기한을 최장 9개월로 못박은 것도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큰 걸림물이다. 그동안 의문사로 제기된 사건엔 40여건에 이르는 데 3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있어 역사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한 조사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원회의 관계자는 "의문사에 대한 범조 또는 피해자들의 양심적 제보가 위원회 활동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 폭압통치에 묻힌 삶 눈 못감은 녀

### 추락...실족...군부대 분신...번사체로...

### 부검 거부 서둘러 장례...사인 '수수께끼'

여 저항하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간첩사건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부인현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부검조사와 거부됐으며, 거들떠볼 때에 급히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이 고문에 의한 탄압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의사병 아래에서 순진재 발전원 고 정준하(사망 당시 57) 선생의 죽음 또한 반드시 풀어야 할 대표적 의문사이다.

백정희 장군은 동산을 하다 실족, 이사한 단소 사고사로 서둘러 장례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저항세력의 지도자에 대한 박정희 정권 저역의 암살'이라는

성공과도 경영학과 재학중 입대했다. 88년 6월20일 부대안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고 우인수(당시 21)의 죽음도 군 당국은 "일사병에 의한 단순 사고사"라고 밝혔다. 주검을 확인한 부모나 동료들이 "은 뱀에 피멍이 들어있었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이말의 애절한 호소는 철저히 무시됐다.

몇몇 학생운동가의 죽음은 사인을 둘러싸고 민주화세력과 정권대규모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기록적 노릇을 하기도 했다. 89년 광주 인근의 지수사에서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철규(당시 24) 조선대 고지 권정종의 죽음은, 당시 정국을 뒤 흔드는 정점으로 떠올랐다. 89년 거문도 앞바다에서 번사체로 떠오른 이내성(사망 당시 27) 전 중앙대 총학생회장의 죽음도 "안기부 개입설"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미궁 속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손희재 기자 wonje@hani.co.kr

## 권력 반인권범죄 반드시 드러낼터

12일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은 양승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66·가톨릭대 대구교수)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의 무게 때문인 듯 숙연한 표정이었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복된 일"이라고 자위하면서도 "민족과 국가의 기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중책에 내가 과연 적임자일까"하는 '자기검열'도 잊지 않았다.

이는 그가 그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밑그림이 그만큼 크고 절실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 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희생자의 한풀이 차원을 넘어서 정권의 비호 아래 이뤄진 가장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규명해내는 일"이라며 "해방 직후 반인륜의 활동에 견줄 만큼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결정적 시험대"라고 자리매김했다.



양 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동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이 기존의 법률기구나 검찰 쪽에 고소할 수 있는 권한밖에 가지지 못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자못 낙관적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법입니까. 대통령도 정치권도 아닙니다. 민주화 희생자의 영령이 뒤를 받치고 유가족이 파나는 투쟁과 희생을 치러 아레로부터 만들어낸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 자체가 탄탄했던 만큼 결과 또한 확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 행동반경 좁지만 타협 안할 것

그러나 양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자못 낙관적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법입니까. 대통령도 정치권도 아닙니다. 민주화 희생자의 영령이 뒤를 받치고 유가족이 파나는 투쟁과 희생을 치러 아레로부터 만들어낸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 자체가 탄탄했던 만큼 결과 또한 확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 참회엔 관용·화해, 은폐엔 단죄

"위원들 개개인의 도덕성도 역대 어느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양 위원장은 의문사 관련 이해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참회하면 진정한 관용과 화해를 베풀겠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다면 역사적인 단죄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상법)를 역임한 양 위원장은 80년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다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후 93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을 지냈고, 95년 이후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글 안영춘, 사진 김경호 기자 jona@hani.co.kr

# '의문사 규명특' 본격활동

## 대통령 직속 오늘 협판식 연말까지 진정서 접수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톨릭대 대우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협판식을 갖고 1969년 3선거 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이마빌딩 2층 사무실에서 의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문사 여부를 판단해 진상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조사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의문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 해야 하며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의문사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최고 2억원)을 받으며 의문사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현재 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사 피해자는 △75년 8월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하산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준하(張俊河)선생 △73년 10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에서 조사 받던 중 숨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등 44명이다. 02-3703-5972~3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 의문死 의문 푼다

## 연말까지 진상규명 신청받아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이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의문사란 1969년 3선거 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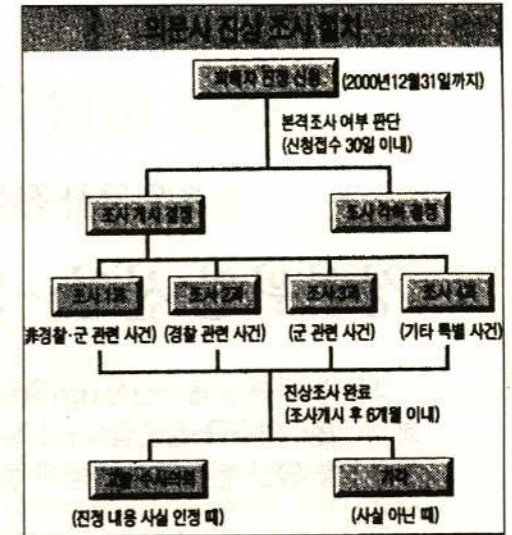
의문사 진상 규명의 근거는 지난 1월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최근 위원 9명이 선출됐다. 정부는 이 중 위원장(장관급)에 양승규(梁承圭) 가톨릭대학 법학과 대우교수, 상임위원에 문덕형(文德炯) 전 전라남도기획관리실장과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이석영(李碩榮) 전북대 교수 등 6명을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4개의 조사과가 설치된다.

## 오늘부터 대통령 직속특 가동

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 의문사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의문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거나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의문사로 여겨지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결정이 내려지면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한 사건당 6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게 된다.

조사기간은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이 된다. 조사결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원회는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게 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44명.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5·6공 당시 공안합수부에 끌려가 숨진 5명,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 후 숨진 대학생 등 22명, 경찰 대공본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대학생 등 17명이다.



◇조사대상자 명단 (유가족측 주장: 44명)

구분	사건가목	사건가목	사건가목
계 (44명)	학인원 (22명)	의문사 (18명)	
진상규명대상 및 관련할수부 관련자	학인원	의문사	의문사
군 관련자	이기훈, 황성희, 이윤성, 김두봉, 박영현, 한희철, 김용겸, 최우희, 박영진, 김영현, 허영근, 노영호, 이승산, 박철호, 박성규, 이이훈, 정영관, 우한수, 박영근, 박성민	의문사	의문사
경찰관련자	김성수, 김문배, 정경서, 오병근, 이대만	의문사	의문사

이 중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와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씨가 특히 눈에 띈다. 최씨(사망 당시 41세)는 1973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뒤 50여시간 만에 숨졌다. 정보부는 투신자살이라고 주장했으나 가족들의 투신현장 공개와 시체 부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의문이 계속돼 왔다.

## 실질권한 없고 증거확보 어려워

유신철폐 운동에 앞장서는 등 한때 '재야의 대통령'으로도 불리던 장씨(사망 당시 57세)는 지난 75년 8월 경기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숨졌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 규명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오래 전의 일인 데다, 공권력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金瑛基기자 ngkim@chosun.com

■ 의문사 진상규명위 첫 회의

상임위원 선임...20일부터 진정 접수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장관급)가 17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1급 별정직)에 문덕형 전남도 기획관리실장과 김형태 변호사, 사무국장에 황인성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969년 3선개헌 이후 발생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속하게 된다.

진정이 들어온 사건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격적인 조사여부를 판단한다. 10일 이내에 판단할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모두 4개이다. 조사 1과는 공안사건, 조사 2과는 경찰관련 사건, 조사3과는 군 관련 사건을 맡고, 특별조사과는 위원장이 지시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는 △진술서 요구 △진술 청취 △외국 자료 협조요청 △동행장 명령 발부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

게 된다.

조사는 6개월 이내 마무리되며,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9개월 이내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또는 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면 민주화보상심의위(위원장 이우정)에 요청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정보를 제공해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달 하순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비상임)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이외에 △이석영(전북대 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박은정(이화여대 교수) △이운성(서울대 의대 교수) △이원영(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백승헌(변호사·민변사무국장) 씨 등 9명이다.

송우달 기자 wdsong@hani.co.kr

“처벌아닌 진실규명이 목적”

의문사 진상규명위 梁承奎위원장 인터뷰

69년 이후 공권력 희생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奎·사진)는 17일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 조사권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공권력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활동은 범법자의 처벌이 아니라 은폐됐던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가 더 크다. 가해자들의 참회와 속죄,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보다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백과 양심선언을 통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다. 유가족들도 처벌

보다는 진상 규명을 원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은.

69년 삼선개헌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죽음은 모두 대상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의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된 피해자는.

현재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사 피해자는 76년 정준하(鄭俊河)선생, 73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등 44명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접수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의문사 관련 진정서 접수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진행할 것. 조사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문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한다.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해당 군감보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국내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여경기자 kid@kdaily.com



의문사 진상 밝히는 길



이동엽 논설위원

'의문사(疑悶死)'라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는 '의문스러운 죽음'이라는 문자상 의미 말고도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일찌기 부분 함축한다. 독재정권 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인이 희생된 사건 중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의문사' 개념이다.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또 위원들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는 장면을 TV로 보다가 문득 1987년 6월을 떠올렸다.

신군부의 독재권력이 막바지 기승을 부린 그때 시위를 취재하느라 명동성당 앞에서 살다시피했다. 독재의 칼날이 번뜩이는데도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레 모여든 시민들이 성당 앞길을 때렸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앞자리를 두른 채 뛰어나온 인근 음식점의 아줌마들. 정장을 하고 갈 길을 재촉하던 초로의 신사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중첩이를 살려내라, 현열이를 살려내라"고 외쳤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번엔 다르다. 이제는 어진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항쟁'이 아니라 '시민혁명'이었다.

제2·제3의 '박종철' 이 기다린다

군부독재의 긴 사슬을 끊은 '8월 시민혁명'은 두 젊은이의 죽음으로 촉발됐다. 그해 1월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군이 경찰에 끌려가 고문 끝에 숨진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2년 뒤 국민의 분노는 돌발처럼 번져나갔다. 6월9일 연세대생 어한열(李韓烈)군이 모교에서 시위 중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숨지자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경찰은 처음 박군의 사망 원인을 '색상

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해 소크사로 몰아가려고 했다. 가톨릭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진상을 추적하고 언론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더라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여태껏 의문사의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진상이 밝혀져 명예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박군의 죽음은 그나마 덜 억울한 편이다. "술 기운에 발을 헛디뎠다"는 지수지에서 역사했다"고 발표된 조선대생 이철규(李哲圭)군, '녹색사업'으로 군에 끌려가 제대 8일을 남겨놓고 열세자살했다고 처리된 성균관대생 이은성(李潤聲)군 등 제2·제3의 슬한 '박종철'들이 아직도 시인규명과 해원(解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 남은 자'의 의무를 다해야

이들이 살아 있다면 지금 30대 중후반. 단련한 가정을 꾸미고 나름대로 포부를 펼치면서 삶의 회로에력을 뛰어나갈 나이이다. 그러나 그들은 갖고 우리는 살아 남았다.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룩해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사한 넋에게서 골대를 벗겨내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은 '살아 남은 자'의 의무다.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지만 솔직히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사건마다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 수사권을 갖지 못한 위원회가 길어야 9개월 동안에 은폐된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기대할 것은 사건 관련자들의 참회와 자백뿐이다.

한국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집권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해 흑백갈등을 치유했다. 기해자인 백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의 진상을 고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리 사회도 똑같은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주 목적은 역사에 정의를 세우고 가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의 결단이 필요하다.

21세기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의문사' '민주열사' 같은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 단어는 역사책에, 그들을 기리는 기념물에, 그리고 동시대들 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민주주의를 키우고 보호하는 버팀목으로 기능해야 한다.

www.kdail.com

“의문死 풀어야 歷史가 쉽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 양승규 위원장

17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66·가톨릭대 법학과 대우교수) 위원장은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아야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평소 의문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나?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의문사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역사의 최악이며 민족의 수치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다."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억

수사요원등 60명 구성 '국민和合 차원서 최선'

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일차적인 것이지만, 차원을 높여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속죄와 참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오래 전의 일인데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당시의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진실은페의 단서가 나올 것이다. 역사에서 완전무결한 조작이란 불가능하다."

-조사요원은?

"검찰·경찰·군에서 파견된 전문 수사요원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민간요원 등 50~6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글=金瑛基기자 ngkim@chosun.com /사진=朱完中기자 wijoo@chosun.com



###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의문사는 '1969년 삼선개헌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그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의 조사과로 나누어 검찰·경찰·군 관계자 등 50여명의 민관 조사단이 의문사 유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진상규명 절차=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 진정을 받으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문사 가능성을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조사 결과 공권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를 검찰총장이나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며, 범죄혐의의 개인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의문사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내부 양심선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상을 공표한다.

◇진상 밝혀지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학생운동을 하다 군입대 뒤 숨진 대학생 22명과 경찰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17명,

#### 연말까지 사건 진정 6개월내 조사 완료 양심선언 보상금제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5·6공의 공안합수부에 끌려가 숨진 5명 등 44명을 의문사로 보고 있다.

사상계 발행인으로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개헌운동을 벌이다 75년 8월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준하(사망 당시 58세)씨와 73년 중앙정보부로부터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자진 출두한 뒤 50시간 만에 숨진 최종길(당시 41세)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 양승규 위원장 인터뷰

### “처벌보단 진실 규명”

양승규(梁承圭·66·사진)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사의 수치스러운 오점인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소감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임무를 맡은 만큼 후손들에게 치욕스런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 의문사를 규명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권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제한적인 면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과 참여를 믿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공권력의 범법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데.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범법자에 대한 처벌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김승현 기자



## 3선개헌 이후 모든 의문死 대상

### ■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거듭된 유가족들의 청원 끝에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발족, 미궁에 빠졌던 각종 의문사의 진실을 캐기 위한 긴 노정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벌써 '만델라 대통령 취임후 2년간 2만1,300여건의 청문회를 열었던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 권력기관의 수많은 '비밀'을 밝혀내고 죽은 이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낼 때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의 대상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969년 '3선개헌' 후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있는 모든 의문사가 조사

### 장준하·최종길씨등 1차 44명이 우선 실질적 수사권은 없어 진통 따를듯

의 대상이다. 1차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제시한 44명의 죽음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측은 ▲군입대 후 숨진 대학생 22명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인사 17명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5공 당시 합수부에서 숨진 인사 5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는 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당시 58세)씨, 73년 10월 '3선개헌' 후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있는 모든 의문사가 조사

보고 출두 후 50여시간만에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41)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91년 숨진 박창수(朴昌洙·34)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죽음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89년 5월 광주 청옥동에 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조선대생 이철규(李哲揆·25)씨, 80년 7월 사회정의구현 부신키독인회 회장을 지내다 국군보안사령부 부신분실에 연행된 뒤 변사체로 발견된 임기윤(59)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중 의문사를 당한 이내창(李來昌·28)씨 등의 죽음도 수많은 의문사 가운

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절차 및 기한을 12월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을 받는다. 위원회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당 6개월의 조사기한이 주어진다. 필요할 경우는 1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 관련 사건 ▲경찰 관련 사건 ▲군 관련 사건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사건을 4개 조사과에서 분담해 진행한다.

조사결과 공권력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를 검찰총장이나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한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 양심선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양승규기자 swyo@hk.co.kr

## “진실규명 통한 화합에 초점”

### ■ 양승규 진상규명위원장

### “공소시효 문제없도록 할것”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梁承圭·가톨릭대 법학과 대우교수·사진) 위원장은 17일 취임기자회견에서 “부끄러운 우리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처벌보다는 진실규명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중점을 둘 활동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의문사 피해자가 있

다는 건 우리 역사의 수치다. 그러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역사의 피해자인 만큼 한풀이가 아닌 진실규명을 통한 화합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해방 이후 식민통치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된 것이 오늘까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범죄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는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와 용서를 구하면 끌어안을 것이다. 유족도 가까이 함께할 것으로 본다.”

- 공소시효가 문제 될 텐데.



“의문사는 대부분 반 인권 관련 범죄들이다. 국제적으로도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법상의 시효문제는 위원들과 의논해 별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 권한과 시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기록과 자료 등을 통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 내부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승규기자 trees@hk.co.kr

#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김대중 대통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 임명장 수여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조사하게 될 의문사는 69년 삼선개헌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때문에 사망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재야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

으로 남아공에서 '아파트에이트' 종식이후 설립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기본 모델로 한 것이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만델라 대통령 취임후 95년부터 2년간 2만1300여건의 청문회를 열고 반인권 행위의 진상을 규명했다.

◆진상규명 어떻게 하나=올해 12월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을 받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문사의 가능성을 판단,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사건 ▲경찰관련 사건 ▲

군관련 사건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사건 등으로 분류, 4개 조사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당 6개월간의 조사 기간이 주어지며 필요할 경우 1차례에 한해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조사결과 공권력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를 검찰총장이나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며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의문사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부 양심선언이나

## 69년 3선개헌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 재야단체 끈질긴 요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공권력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의 양상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의문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뒤 숨진 대학생 22명,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인사 17명,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5·6공 당시 공안합수부에 끌려가 숨진 인사 5명 등

44명을 의문사로 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인물은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받았던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씨(사망 당시 58세). 장씨는 유신헌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개인운동을 벌이다가 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장씨가 등산도중 실족·익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재야는 의심할 여지없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암살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당시 41세)도 유신시절 의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최씨는 73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뒤

50여시간 만에 숨졌다.

정보부는 "최씨가 간첩활동을 시인한 뒤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변소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공개와 부검 요구가 거부되는 등 의문이 제기돼왔다.

노동계에서는 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던 박창수씨(당시 34세)의 죽음이 대표적인 케이스. 박씨는 대우조선의 과업관계로 긴급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틀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노동일보 구독신청 (02)2007-6001~2

### 현장기자



이학준 사회부

## '의문사' 진상 규명 기대 만큼 큰 우려

17일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들에게는 한(恨)의 결정체다.

지난 69년 3선개헌 발의 이후 원인 모를 이유로 군(軍)에서, 경찰에서, 정보기관에서 숨진 사망자들은 최소한 44명에 이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가지.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정보기관과 군 당국에 대해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울분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만큼 대통령 직속 규명위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그러나 이들의 걱정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단의 활동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민·관 협동 조사단은 민간

인 대표 22명과 국정원, 경찰, 군과견 공무원 26명으로 꾸려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가해자 대표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형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도 과견 공무원에 의한 규명위 내부 정보 유출, 가해기관 출신 조사관의 소극적 자세, 가해 당사자들의 압력 등을 우려했다. 규명위의 활동이 내년 12월31일까지 제한된 것도 걱정거리다. 오는 12월31일까지 유가족들이 의문사 진정을 내면 규명위는 한달동안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최장 9개월내에 사건 조사를 종결지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문사는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물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찾아 다니며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의문사 1인당 관계자 200여명을 만나야 하는데 9개월의 시간은 짧기만 하다. 붓물처럼 밀려들 의문사 진정을 50명 남짓한 조사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 지도 자신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국민연대 김학철 진상조사단장은 "우리는 수십년을 기다려왔다"면서 "넘어야 할 100개의 고개 중 한가지 고개를 넘었을 뿐"이라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arisu@kmib.co.kr

### 의문사 규명의 역사적 당위

그제 발족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인권과 정의가 부당한 공권력에 짓밟힌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되짚는 과업을 수행한다. 지난 시대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수술인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정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적 합의다.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길게는 30여년이 지난 의문의 죽음, 그것도 대부분 독재시대 공권력이 은밀하게 자행한 범죄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과업이다. 구시대의 잔재가 사회 인습과 제도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현실은 기대를 한층 낮추게 한다. 비록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 위원회이지만, 정보기관과 경찰·검찰·군 등 폐쇄적 특수기관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는 술한 장애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규명은 우리 사회 모두가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오직 남은 가족·친지들의 해원(解怨)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과, 은밀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의 기억과 양심에 새겨진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한 대화합 작업인 것이다. 조사 대상자와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한다는 자세를 갖고 적극 협조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깨닫기를 당부한다.

과거청산이 반드시 처벌과 응징일 필요는 없다. 우리보다 훨씬 극악한 인권말살을 경험한 남아공은 의문사 진상규명과 사죄(謝罪), 그리고 용서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뤘다. 그 첫 단계인 진상규명 작업이 의혹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 의문死 진상조사에 거는 기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인권탄압이 극에 달했던 유신 초기에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가 사망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하고 장례도 서둘러 치르도록 했으나, 당시에 정 부발표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 그의 27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27년이 지나도록 그의 사망에 대해 공식적 재조사를 한 적이 없어 최 교수는 아직도 '간첩'으로 남아 있으니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화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6공 시절에 발생한 몇몇 유명한 의문사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말로 당시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했는지, 아니면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결과적으로 의문사가 되고 말았는지 그 진상은 알 길이 없다.

최근 지난 1969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를 규명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최

종길 교수, 75년에 사망한 사상계사 발행인 장준하씨, 그리고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당한 공권력 개입으로 인한 죽음으로 밝혀지면 위원회는 관련자를 고발하게 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이 말하듯이 의문사 규명은 의문사를 당한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이로써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사 규명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적 증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 결국 살아 남은 관련자들이 역사와 양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활동으로 의문사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잘못을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사람들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민주화人士들 안개속 死因... 대통령직속 '진상' 발족

# 자살이나 타살이나 의문死 풀리려나

지난 88년 3선거연 이후 민주화운동 중 해의 의문사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족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가족 등의 진정을 받아 사건당 6개월씩 조사를 벌인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측은 진상규명 대상자로 44명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중심으로 의문사에 얽힌 문제점을 알아본다. /편집자

예기를 들었다. 서울법대 교수이던 최종길(당시 41세)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중학교 동창생과 연관했다는 예기였다. 최씨는 중경 속의 협조요청에 따라 직접 최 교수를 정초인으로 10월 16일 오후 2시 정오부터 자택을 두 차례도 찾았다. 그로부터 50여시간 뒤인 19일 오전 최씨는 형의 사망소식을 듣게 됐다. "최 교수가 형의가 드러나자 양

심의 가책을 느껴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중경 속의 예기였다. 최씨는 믿기지 않았다. 투신했다는 시적이 비밀정보기관의 중경의 모든 항문이 잠겨져 있을 때이며, 바다에서 1.5m 높이에 있는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최 교수를 말할 지름이 없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 최씨는 형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을 당시 정황증거들과 함께

의 아들 광은(37·경희대 법대 교수)씨는 "투신 현장에 유혈이나 이를 끌고 왔던 흔적이 없는 점, 투신 시기에 대한 중경 수사관들의 진술이 맞달리는 점, 사신 사건에 고문 흔적이 있는 점 등 의혹거리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 경찰·경찰-안기부 등으로 '공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1989년 5월 10일, 조선대생 이철규(당시 25세)씨가 광주시 칠곡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 '의문의 죽음' 유형

최종길 교수와 이철규씨 외에도 의문사한 사람들은 많다. 유신 시절 '사회정의구현부 산하 국인회' 회장을 지낸 임기원(사망 당시 50세) 역시도 그 중의 하나. 임씨는 지난 88년 7월 19일 보안사 부산본실에 잠고인으로 불려간 뒤 서울 연세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7월 20일 숨졌다. 당시 보안사측은 가혹행위를 했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평소 혈압이 80-100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 발암으로 인한 이상도 없었고, 뒷머리 권박이 3cm가량 떨어진 채 피가 말라 붙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고문치사의 의혹을 제기했다.

###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 사건

1978년 10월 13일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최종길(당시 29세)씨는 동료들로부터 갑박 놀림

###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 사건

1978년 10월 13일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최종길(당시 29세)씨는 동료들로부터 갑박 놀림

###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

경찰·경찰-안기부 등으로 '공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1989년 5월 10일, 조선대생 이철규(당시 25세)씨가 광주시 칠곡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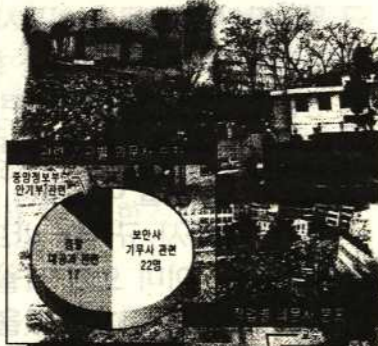
경찰·경찰-안기부 등으로 '공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1989년 5월 10일, 조선대생 이철규(당시 25세)씨가 광주시 칠곡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 노동자서 목사까지

### 보안활동 조사서 사망

### 고문死死 등 논란 일어

반전중앙일 노조위원장 박영수(36)씨는 91년 5월 6일 대구조선 파업관계로 간부수령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부상하고 안양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 밖 병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레/김경환 기자 molla@chosun.com

### 이철규씨 사건

### 89년 대학생 시위수사 한창

### 校誌관련 수배중 변사체로

### 검찰 "검문받다 실족해 의사"

### 국회조사도 물거품... 의혹 여전

기폭했으나, 중경 속의 감시의 눈 때문에 1년 뒤인 1994년 말에 친구와 사제단을 통해 세상에 사건을 알릴 수 있었다.

### 이철규씨 사건

### 89년 대학생 시위수사 한창

### 校誌관련 수배중 변사체로

### 검찰 "검문받다 실족해 의사"

### 국회조사도 물거품... 의혹 여전

그러나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대학가와 제야의 진상규명 촉구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마침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까지 구성돼 보훈 중인 조사를 받았으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유족들은 여러 의문점을 들어 고문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생전 가족들과 가졌던 단란했던 현매.

# 은폐된 진실 밝혀내 어두운 과거사 청산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묻혔던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  
역을 한 죽음 진상 규명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 도모

진상규명위는 올 연말까지 의문사 조사 진정서를 접수해 한달내 조사대상 사건들을 선정한 뒤 6개월간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한다. 사건 조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 동안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다.

결친 사고의 소신이다.  
17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진상규명위 위원장에 취임한 양승규(66·시몬·가톨릭대 대구 교수)위원장은 "은폐된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의문사 희생자들의 가족을 모인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가 지난 88년 10월부터 135일간 계속했던 농성과 94년 11월의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그리고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30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등 10여년에

다에 있다고 보는지.  
"진상규명위의 활동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어두운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이 일차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미는 어

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자진해 진실을 밝힐 때는 여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풀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시적이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진상규명위는 '도덕성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정부와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때도 '도덕성'을 강조할 것이다.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조사나 수사자료 협조가 안될 경우 이 정부의 '도덕성'이 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위원회만큼은 도덕성 사비에 맡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 위원장은 사도 바오로와 성 아우구스티노를 예로 들면서 "어두운 과거사에 동참했던 가해자들이 참회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자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상규명위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자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리길재 기자]

김영배 칼럼



논설위원

민주화투쟁이 한창이던 1986년 6월 부산 송도 앞 바다에서 한 젊은이의 의 사체가 발견된다. 3개의 시멘트덩이를 매단 채 수심 17m의 깊이에 누워 있는 자세로 발견된 그는 그해 서울대 지리 학과에 입학한 김성수군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밝혀야

경찰은 이 사건을 성적불량을 비판한 자살로 마무리해버렸다. 대학교에 막 입학해 아직 첫 학기 시험도 치기 전인데 그는 성적을 비판해서 시멘트덩이를 세 개나 묶어 두고 방파제를 뛰어 넘어 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강릉 출신인 그는 몇 차례 군사통제 반대 데모에 가담했었고 죽기 며칠 전 자 취방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의 바닷속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지난 유신시절 또 5공 군사정권 시절 이렇듯 의문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권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고향마을 뒷동산에 병사 체로 발견된 청년이 있는가하면,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다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는 교수도 있다. 이들 중 몇몇 사건은 유가족의 끈질긴 요구로 국정조사 등 공개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의문死와 비뚤어진 권력

그늘 속에 묻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반정부적이거나 또는 반체제적 이었기 때문이었다. 군부통치의 정권 방어 수단이었던 안보와 체제논리에 저항한 사람은 살림 죽더라도 죽음의 정당성 여부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몰아가던 경직된 사회의 논조리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의문사(疑問死)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마침내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해방후 호자부 지 끝나버린 반민특위(反民特委)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문사 진상조사위가 과연 일

마만큼 군사정권의 반인권적·반민주적 범행을 규명해 낼 것이며 얼마만큼 그것을 단죄하고 청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1년도 채 못된다. 언뜻까지 진정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3개월 더 연장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끝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이란 게 '공권력에 의한 살인' 행위를 규명하는 것인데 이런 미약한 권한으로 뭘 조사할 수 있을는지, 한낱 구색 갖추

진상조사위 활약 기대

얼마 전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트를 영국 경찰이 구속해서 국제적인 파문이 인 적이 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칠레를 십수년간 철권 통치하는 동안 수천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의문의 실종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칠레의 수십년 군부통치의 후유증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이 의문사 진상규명의 출발점은 바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정치화된 공권력에 대한 검증이다. 그것을 이 정부가 과연 해낼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만약 이 의혹이 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열려가 옛보이던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특별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든지 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과거의 독재정권에 대한 재조명이라면 안건가는 현재의 축소 지향적인 은폐수사도 현재의 부패 정치와 함께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의 활동을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민적 관심이다.

Reprobe of Questionable Deaths Begins Amid High Expectations

By Sah Dong-seok Staff Reporter

A nationwide reprobe of "questionable deaths" which occurred during past dictatorial regimes was launched yesterday with the inauguration of a panel under the direct control of President Kim Dae-jung.

The "Questionable Death Fact-Finding Commission" will primarily deal with cases related to the pro-democracy movement after 1969 in which the causes of death had not been verified clearly and law enforcement i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1969,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forcibly amended the Constitution to assume the presidency for the third 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panel was in accordance with a law legislated in January, modeled after a similar one in South Africa.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schedule, the panel will receive questionable death-related inquiry applications from bereaved families by the end of this year before deciding on whether or not to reopen probes within 30 days.

Cases to be dealt with include those related to police, military and other state organizations and special incidents recognized by the panel's head. Up to six months is to be given to each case with a possible

three-month extension.

If the panel confirms evidence of a crime committed by state organizations, it will ask the prosecutor-general or military chiefs to investigate those cases. Up to 50 million won in reward will be given to whistle blowers or informants who play a key role in uncovering the truth.

A civic group, which represents bereaved families of the alleged victims, says at least 44 people fell victim to questionable deaths. The 44 break down to 22 collegians who died in military barracks; 17 people who died while being questioned by anti-communist police units; and five who died while being interrogated by intelligence agencies.

The most prominent figure who suffered a questionable death is Chang Joon-ha, a former publisher of "Sasanggye," a progressive periodical, who had been hailed as a great leader. Chang, who was 58 at the time of his death, was found dead at a mountain in Pochon north of Seoul in August 1978.

Police said Chang lost his footing while mountaineering but dissidents claimed then that the incident was a murder committed by the Park regime, alleging that Chang had been spearheading a movement to amend the anti-democratic Constitution.

The death in 1973 of Choi Jong-

kil, a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professor, is also suspected to be a murder. Choi died at the then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headquarters, 50 hours after surrendering himself for questioning over a massive espionage case in Europe.

The KCIA said Choi, then 41, plunged himself to death from a rest room after admitting to his spying activities. But the KCIA turned down requests to disclose the scene of his death and conduct an autopsy, raising questions that investigators may have tortured him to death.

Park Chang-su, then 34, former head of the Hanjin Heavy Industries labor union, may have been killed in connection with his labor activities. Park was found dead at a civilian hospital in 1991 after suffering from injuries inflicted at the Seoul Detention House in Uiwang south of Seoul. He had been placed under arrest after attending a conference of labor leaders.

While expectations for the reprobe remain high in the context of resolving bad legacies of the pas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panel will reap fruitful results. Because the panel actually has no investigative rights,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it to secure proof of torture, homicide or other cruel acts.

sahds@koreatimes.co.kr

# Reports of Questionable Deaths Regions Amid High Expectations

At a time when the region is expected to be a leader in the world, reports of questionable deaths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reports of questionable deaths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reports of questionable deaths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 의문사 진정접수 관련 보도

At a time when the region is expected to be a leader in the world, reports of questionable deaths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The high hopes of the region are being dashed by these reports, which are being received from several areas.

2000.11.23 (목)

Audio News

- English News
- 연합 투데이
- 오늘의 운세

MONEY

- Money Info
- Stock

ENTERTAINMENT

- Music Bank
- Movie
- Book&Book
- Television

종목시세

GO

뉴스 메신저

- 맞춤뉴스
- 연합티커

서비스광장

- 회사소개
- 인사.부음
- 법률상담
- 사진서비스
- In4Top서비스
- 복권당첨안내
- 경품대잔치
- 환타지게임



**이북의 죽음 징계**  
 민주화운동 국민연대 의문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가 23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열린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0,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 5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영수

내일 한전노조 파업

노.정 충돌 위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한국전력 노조의 24일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



- ▶ 퇴출증권사 부실책임자 180억 재산은닉
- ▶ 2차 이산가족 방문단 5차례 상봉
- ▶ 당정,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이견
- ▶ 4개은행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전망
- ▶ '내달부터 자기앞수표 색상 바뀐다'
- ▶ 'SKM 자발부도 경위 조사'
- ▶ '프로야구 트레이드.보류제도 불공정'

Stock	11/23 14:44
종합주가	515.73 ▼ 6.60
코스닥	72.77 ▼ 4.36

오늘의 초점

- 수검표인종과 득표전망
- 이집트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 소환 배경

연합시론

- 황장엽씨 반발성명 유감
- 현대 지구안.실천이 관건
- 하교 가까운 곳부터

sports | 박찬호 | 프로야구



- 우즈, 역시 '왕중왕'
- [프로농구] 중위권 순위다툼
- 정인교 3점슛 500개 달성

People | 인물검색 | 북한초정인물 |



- 물러나는 30년 통신문
- 이계철 한통사장

국제

- 체니 심장 발작...스텐트 삽입수술 받아
- 미 대선위기 '정치적 아마겟돈' 조짐
- 부시 연방대법원 상고...혼미 거듭
- 이-팔사태 갈수록 격화...또 수십명 사상
- 베를린서 정신대 사죄.배상 요구 시위

북한

- 황장엽씨 統政研 이사장직서 해임

정치

- 김덕룡의원, '개헌통한 정계개편' 주장
- 당정,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이견
- 한나라당, 황장엽씨 면담
- 김대통령 발언을 무거운 순방길
- 여야 국회정상화 진통

경제

- 근로자주식저축 다음달중 시행합의





# 사회 Society

연합속보 · 국제 · 정치 · 북한 · 경제 / 산업 · 사회 · 지방 · 문화 · 스포츠 · 정보 / 과학 · 라이프

- ① 기사검색
- ② 자유토론
- ③ 회원가입

## • 사회복지

### 의문사 5건 진상규명 진정서 접수 (종합)

#### FRONT PAGE

사건/사고

법원

법무/경찰

경찰

교육

국방

환경

사회복지

노동

관련사이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지난 70,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3일 지난 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70,80년대의 대표적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강제징집돼 군복무중 머리부분이 없어진 시신으로 발견된 고려대생 김두황씨(1983년) ▲군복무중 광주항쟁 옹호 발언을 했다가 심한 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총에 맞아 숨진 전남대생 이이동씨(1987년) ▲1987년 6월 실종됐다가 이듬해 3월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1988) ▲대공수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연행된지 8일만에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된 인천 도시가스노동자 신호수씨(1986) 사망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시 당국의 공식발표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토대로 한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명예회복이 없이는 국민적 용서와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사범위가 심하게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의 조직적, 체계적인 권력남용과 사건은 폐조작기도를 파헤치기는 역부족'이라며 '지난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임수경(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씨 가족들은 지난 84년 연세대 4학년에 재학중 강제징집됐다 사망한 임씨의 오빠 윤준씨에 대해 '정확한 사망원인도 알지 못했고 자살이라고 믿지도 않았지만 유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각서를 쓰고 시신을 인도받았다'며 이달 초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에 접수했다.

solatido@yna.co.kr (끝)



“의문사 규명하라” 고 최종길 교수 추모모임, 민주노총 등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단체들이 23일 최고수등 의문사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신청서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정현기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0, 8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

## “5대 의문사 진상규명 해주오”

### 국민연대, '진상규명'에 최종길교수등 5건 신청

70, 80년대 대표적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된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단병호 등)는 23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최종길 서울대 교수 의문사 등 5건의 의문사를 접수시켰다.

이들 사건은 정황상 자살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수사담당자 등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는 등 유가족들이 줄곧 고문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종길(당시 42세·서울대 법대 교수·73년 사망)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사를 받던 중 7층 조사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8년 서울지검은 “구속영장, 진술서, 녹음 등 수사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유가족들은 “사체부검 사진 등을 보면 간첩단사건 조작을 위한 고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두황(당시 22세·군복무중·83년 사망) 고려대 재학중 강제징집된 뒤 군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군당국은 “근무 중 총기로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죽기 직전 보낸 편지를 볼 때 자살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이동(당시 22세·군복무중·87년 사망)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입대, 군복무 중 사망했다. 군당국은 “불행한 가정환경을 비판,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동료들은 “6월항쟁에 대한 옹호발언을 하다 구타당한 뒤 끌려갔다가 총성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정경식(당시 29세·대우중공업 노동자·87년 실종·사망) 노동운동을 하다 실종된 뒤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경찰은 비판자살로 결론내렸으나 유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해 왔다.

●신호수(당시 24세·가스배달원·86년 사망) 인천에서 3명의 형사에게 연행된 뒤 8일 만에 전남 여천의 한 동굴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시신을 가매장했다.

국민연대측은 “우선 5건만 접수시킨 뒤 조사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 등이 많이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의 권력남용과 사건 은폐조작 기도를 파헤치기는 역부족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삼기자 youngtan@kdaily.com

## “의문死 의문 밝혀라” 진정서 제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김두황씨등 5건 '규명'에

70, 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10월17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3일 70, 8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 44건중 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대표적인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차 진정서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최종길 교수 외에 △강제징집돼 군복무중 머리부분이 없어진 시신으로 발견된 고려대생 김두황씨(1983년) △군복무중 광주항쟁 옹호 발언을 했다가 심한 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총에 맞아 숨진 전남대생 이이동씨(1987년) △1987년 6월 실종됐다 이듬해 3월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근로자 정경식씨(1988) △대공수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연행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 80년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도시가스노동자 신호수씨(1986) 사망사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당시 당국의 공식발표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토대로 한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명예회복 없이는 국민적 용서와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초 임수경(林秀卿·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씨 가족은 84년 연세대 4학년에 재학중 강제징집됐다 사망한 임씨의 오빠 용준씨에 대해 “정확한 사망원인도 알지 못했고 자살이라고 믿지도 않았지만 유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각서를 쓰고 시신을 인도받았다”며 이달 초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에 접수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0,8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남재현기자

# “숨겨진 죽음 진실규명은 남겨진 이들이 갚아야 할 빚”

## 의문사 가족들 집회

암울한 시절 가족을 잃고도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유족들은 그간 분노와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내,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두번이나 만나 진실규명을 호소한 어머니, 진실을 알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아버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崔鍾吉) 전 서울법대교수, 정경식, 신호수, 김두환, 이이동 씨 가족들은 23일 오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1973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변을 당한 최교수의 아들 최광준 경희대학교수는 “진실규명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는 부채였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중정 직원의 살벌한 감시 때문에 집을 찾아온 워싱턴포스트기자에게 말 한마디 못한 것이 한이 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최교수는 또 의문사 직후 당국자들이 찾아와 ‘외부에 알려

유.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평생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88년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에게 두차례나 찾아가 진실규명을 부탁했더니 나중에 힘이 생기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로해줬지요.”

## 서슬퍼렇던 감시속 병어리 냉가슴

## 간첩첩박-보상금 회유 말뚫할 고통

## “역사와 후대에 떳떳한 모습이고파”

지 않는다면 간첩혐의로 발표하지 않고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종 9개월 뒤인 88년 3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인근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전 대우중공업 근로자 정경식씨의 어머니 김윤선(66·경남마산시합포구)씨는 두 곳에서 입사합격통보를 받은 아들에게 대우입사를 권

86년 6월 인천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8일만에 전남 여천군 대미산의 바위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씨의 아버지 신정학(64·서울성동구

마장동)씨의 삶도 고통스러웠다. 신씨는 “죽기 전에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한을 풀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버텨온 세월이었다”고 회고했다.

의문사 가족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와 후대에 떳떳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강은기자 kelee@sgt.co.kr

# 의문사 5건 ‘규명 진정서’ 접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3일,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 의문사 사건 등 70~80년대 대표적 의문사 44건 중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1차로 접수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사건에 대한 당시 당국의 공식발표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토대로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진정서에는 ▲학생운동 하다 강제징집된 후 머리부분이 없어진 시신으로 발견된 고려대

생 김두환(83년)씨 ▲군복무 중 광주항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 구타 당한 후 총에 맞아 숨진 전남대생 이이동(87년)씨 ▲87년 6월 실종됐다가 다음 해 3월 야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88년)씨 ▲대공수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연행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인천 도시가스 노동자 신호수(86)씨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유가협 홈페이지(www.ugh.or.kr)에 사진 등 의문사 자료일부를 공개한 이 단체는 자료가 추가로 수집되는대로 진정접수 마감시한인 내달 말까지 나머지 39건에 대한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金玟植기자

# 의문死 5건 규명 진정서

**‘민주정신 계승 국민연대’  
故최종길 교수건 등 제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3일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70, 80년대의 대표적인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

어 “진상규명을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사건 은폐조작을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인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수된 5건에는 ▶서울시경 대공수사와 경찰관에게 연행된 지 8일 만에 숨진 인천 도시가스 노동자 신호수씨(86년)▶강제징집돼 군복무 중 사망한 고려대생 김두황씨(83년)▶군복무 중 광주항쟁 옹호 발언을 했다가 총상으로 숨진 전남대생 이

이동씨(87년)▶실종된 지 1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88년)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까지 의문사 관련 진정을 받는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이로써 이달 초 접수된 임수경(전 전대협 간부)씨의 오빠 용준(84년 연세대 4년 재학 중 강제 징집됐다 사망)씨 사건 등 2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눈물을 닦아다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들이 1973년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의문사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등 70·80년대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 규명 진정서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내기에 앞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안 고 정경식의 어머니 김윤선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hani.co.kr

#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 5건 접수

## 국민연대, 최종길 교수 사건 등 규명 촉구

지난 70~8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3일 지난 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대표적인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접수한 진정서 5건에는 ▲ '유령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조사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

종길(1973년 사망, 당시 42세) 씨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머리부분이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 김두홍(1983년 사망, 당시 24세) 씨 ▲일대후 광주항쟁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심한 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총격에 의해 사망한 아이들(1987년 사망, 당시 22세) 씨 ▲민주노조파 후보지자 선거 운동을 하다 87년 실종된 후 이듬해 3월 인근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된 정경식(1987년 사망, 당시 29세) 씨 ▲대공수사과 형사 3명에게 연행된 후 8일만에 여천군 대미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1986년 사망, 당시 24세) 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홍선 기자 hng99@labov.com

가 포함됐다. 진정인 대표 김승훈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의문사 사건이 과거 속에 묻혀진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에 가담했던 수사요원이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4일(금)

제 17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아이들, 김두홍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 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조 국민연대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날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따라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이기에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원천적인 걸림돌"이라며 "결국 기록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의 자료현조와 관련 인사들의 양심적 증언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관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조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다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국민에 대한 홍보와 양심선언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국장은 "이미 위원장이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실무진들이 오히려 협조할 지는 가늠이 안 된다"라며 "앞으로 한두달 정도 결과가 지나보면 판단이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은 한달 내로 조사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가 결정되면 그후 6개월 동안 조사작업이 진행된다. 조사가 미비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사건

의문사 진상규명사건이 1차로 5건이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진정인 대표 김승훈 신부는 내달 말까지 나머지 39건에 대한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44건이 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지만, 유신시절과 5공시절의 의문사들은 몇몇 사건 유가족들의 끈질긴 요구로 공개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묻혀졌다. 따라서 48명의 조사원, 그것도 가해자 가족일 수 있는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이 26명이나 되는 가운데, 기껏 길어야 9개월동안 조사해서 과연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의문사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문사가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물증이 사라졌다는 점도 진상규명 결과를 어렵게 하지만, 국가권력의 살인행위를 앞장서고 묵인했던 정치세력과 인습, 제도들이 여전히 뿌리깊다는 사실이 더욱 암울하게 한다. 81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많이 제기했지만, 한 건도 승소한 것이 없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박정희

기념관을 거대하게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정희씨가 저질러온 살인범죄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전두환씨의 추징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두환 정권시절의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과거청산이 반드시 처벌과 응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과거청산은 진실이 규명되고 제자리를 자리잡을 때부터 논할 문제이고, 진실규명은 가해자집단들의 사죄라는 것이 분명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화해와 화합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은 또다른 정치논리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유가족들 중 한을 품고 자살하거나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다. 또 지금도 당시 조사로 인한 심각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육체적 손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시대의 아픔을 마감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인권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분명한 진상규명이 되려면, 대통령 직속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그 시한을 한정하지 않는 장치 마련부터 해야 할 것이다.

## Civic Groups Request Probes Into Five Suspicious Deaths

By Park Yoon-bae  
Staff Reporter

Civic groups yesterday requested a government commission to conduct investigations into five mysterious deaths which have repeatedly raised suspicions about systematic use of terror by past military regimes.

The Korea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KABFD) and the Truth Commission on the Mysterious Death of Prof. Tsche Chong-ki submitted an appeal to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alling for fair and thorough probes into the cases.

The five are Tsche Chong-ki, a professor of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tudent activists Kim Tu-hwang and Lee Yi-dong, Daewoo Heavy Industries worker Chong Kyong-shik, and Incheon City Gas employee Shin Su-ho.

"We request the government to launch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the mysterious deaths. Then law-enforcement and anti-espionage officials should be punished if they are found to have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the civic groups in a statement.

The groups also called for their post-mortem rehabilit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ir reputation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show respect for democratic values.

They urged the government to rewrite the special law on fact-finding on suspicious deaths. This would give more investigative powers to the presidential commission and help reveal the truth about acts of violence committed by past military regimes.

The groups pointed out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deaths thoroughly because of persistent cover-ups by the law-enforcement authorities. The commission was created last month.

More than 300 bereaved families, priests, workers, professors, students and citizens joined the civic groups' appeal to the government to shed light on Tsche's death.



**Korea Time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a park in Kwanghwamun, downtown Seoul, Thursday, Park Jong-ki, father of Park Chong-chol, who was tortured to death by police in 1987, urges the government to launch probes into five suspicious deaths.

The appeal was also signed by several incumbent and former lawmakers, including Rep. Kim Deog-ryong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Tsche, then 42, was found dead at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on Oct. 16, 1973, after he was summoned by the anti-espionage organ for questioning in relation to a spying case.

In an alleged cover-up, the KCIA announced nine days after his death that Tsche had committed suicide after confessing to spying for North Korea in Europe.

The professor's family, SNU professors and students have voiced suspicions that the KCIA tortured Tsche to death while trying to fabricate proof of his involvement in spying.

They have claimed the KCIA was desperately trying to crack down on the mounting student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ial government of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following the intelligence agency's August, 1973 kidnapping of then 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who is now president of Korea.

In October, 1988, the prosecution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Tsche case at the request of

the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CPAJ).

The prosecution announced the result of its probe on Oct. 19, the deadline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saying it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Tsche killed himself, or that he was murdered.

The prosecution also failed to prove Tsche was involved in any espionage activities.

The 22-year-old Kim Tu-hwang was killed in 1983 while serving as an enlisted soldier. He was found dead with his head cut off. Before conscription, he was a student of Korea University who had joined the pro-democracy movement.

Lee Yi-dong, a stu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as beaten to death while serving the army in 1987 over remarks defaming the May 18, 1980, democratic movement in Kwangju.

During that time, the Kwangju pro-democracy struggle was classified as a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right aft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in 1979.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had often used military conscription of college students to crack down o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byb@koreatimes.co.kr

# Five Groups Request Probe Into Five Suspicious Deaths



The five groups, which include the Communist Party, the National Lawyers Guild, the American People's Party, the American Youth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s Party, have requested a probe into the deaths of five individuals who were allegedly kill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The groups claim that the government has covered up the truth about the deaths and that the individuals were innocent victims of government actions. They demand a full and open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the release of all relevant documents and information.

The five individuals whose deaths are being investigated are: [Name], [Name], [Name], [Name], and [Name]. The groups allege that these individuals were killed by government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They claim that the government has covered up the truth about the deaths and that the individuals were innocent victims of government actions. They demand a full and open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the release of all relevant documents and information.

# 조사관 임명식 관련 보도

조사관 임명식 관련 보도



# 사회 Society

연합속보 국제 정치 북한 경제/산업 사회 지방 문화 스포츠 정보/과학 라이프 2000.12.01

- 🔍 기사검색
- 🗨️ 자유토론
- 👤 회원가입

### FRONT PAGE

- 사건/사고
- 법원
- 법무/경찰
- 경찰
- 교육
- 국방
- 환경
- 사회복지
- 노동
- 관련사이트

## 직장의보로 내년 1월 20% 이상 인상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20% 이상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이 확대돼 의약분업 시행 이후...

### 2001학년도 대학입시



멜런트 김영옥 오빠 상봉  
멜런트 김영옥씨가 1일 롯데월드호텔 방에서 오빠인 북측 상봉단 김영환씨와 옛사진을 보고있다./사진공동 취재단/진승현씨,서울지검에 자진출두

롯데호텔, 성희롱 관련 임직원 21명 징계  
호텔롯데는 1일 노동부로부터 성희롱가해자로 통보된 임직원 32명중 21명에 대해 ...

20톤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9명 사상  
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앞에서 20t 화물차가 언덕길을 내려오다 ...

과천 부모토막살해 대학생 아들 사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일 부모를 토막살해한 혐의 등으로 ...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95만6천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5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 열린금고 불법대출

### 주요뉴스

●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판결 잇따라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

● 검찰, 경매부정 브로커,집달관 무더기 적발  
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단독으로 경매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 강우량 감소로 한강 등 수질 악화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한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인봉의원 재판 또 연기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취·金大燾 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임명, 본격 활동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

### 판결

● '전투,준전투에 동원돼 본해 모두 보상해야'

### 환제

● 1백회 맞는 '시민과 시장의 토요일데이트'

### 현장

● 초등학교 학생이 사이버폭력가해자





# 사회 Society

연합속보 | 국제 | 정치 | 북한 | 경제/산업 | 사회 | 지방 | 문화 | 스포츠 | 정보/과학 | 라이프

- 기사검색
- 자유토론
- 회원가입

## • 사회복지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임명, 본격 활동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9명의 조사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은 노동, 인권 등 사회운동에 참여해온 22명의 민간인과 검찰,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10년 이상 일한 2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위원회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시민운동, 인권, 법조, 종교, 언론 등 사회 각계의 지도적 인사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어떤 외압이나 이해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조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daeho@yonhapnews.co.kr (끝)

2000/12/01 09:53 송고

[ < 이전화면 ]

프린트서비스

.. top

## 여의나루

### '한지붕 두가족' 의문사규명특

10여년전 극과 극의 위치에서 수배자와 수사관으로 맞붙었던 '왕년의 맞수'가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한 민·관 조사관으로서 앞으로 같이 활동한다.

1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관 합동 조사관들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인적구성이 돼 있다. 조사관 49명 중 민간 출신 조사관 22명은 그동안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동, 인권 등 사회운동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고, 파견 공무원 조사관 27명은 경찰, 군, 국정원, 검찰 등에서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민간 출신 조사관은 과거 "의문사는 반드시 수사기관과 연계돼 있다"면서 경찰 등 이들 수사기관과 맞서 계속 싸워온 사람들인 반면 공무원을 파견한 수사기관은 이를 부인하며 과거 동료 수사관들을 보호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술밥을 먹으며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민간 출신 조사관 중에는 의문사 당사자와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 있는 인사도 포함됐고, 파견 공무원 중에는 과거 기무

사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사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팀워크를 이뤄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인 한 조사관은 "비록 한때 동료였던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파견된 또 다른 조사관은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과거 의문사에 대해 많은 얘기를 전해들었고 운동권 학생들을 조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문사 사건의 윤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오히려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진북지역 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등에서 활동해온 조사관(전문위원) 정형수씨(38)는 "과거 공권력을 남발했던 경찰이나 검찰, 안기부, 군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분으로 온 파견 공무원들이 진상 규명 의지도 높고 전문성도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유족들이나 국민이 조사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규(梁承圭)위원장은 "민·관 합동조사 형태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문사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두 당사자가 진상규명이라는 절체 절명의 목표로 조화를 이룬다면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석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49명 임명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조사관 49명에 대해 임명식을 갖고 조사활동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의문사 진상조사를 맡은 조사관은 노동·인권 등 사회운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민간출신 22명과 검·경·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27명 등 총 49명이다.

양승규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두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며 "조사관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화해와 인권신장을 위해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최영도 변호사, 이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종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 각 분야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조사단은 경력 7년 이상의 민주화운동 경력자로 구성됐으며, 파견공무원은 법무부 7명, 국방부 11명, 경찰청 8명, 국정원 1명 등이다.

<고민구기자>

###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

#### 민·官조사관 50명 임명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사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은 노동, 인권 등 사회운동에 참여해온 23명의 민간인과 검찰,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10년 이상 수사분야에서 종사한 27명의 공무원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의문사

건 외에도 이달말까지 접수되는 모든 진정사건의 진상규명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위원회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시민운동, 인권, 법조, 종교, 언론 등 사회 각계 인사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선서를 통해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어떤 외압이나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정용기자

jjbrave@kyunghyang.com

### “民-官 힘 모아 의문사 밝힐터”

#### 진상규명추 조사관 50명 다짐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진상 규명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대립적 위치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다짐했다.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사진)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50명의 조사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 분야에서는 황인성(黃寅成)사무국장과 김학철(金鶴喆)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등 7년 이상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민간



보원 공무원 27명이 위원회에 접수된 7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게 된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종배(金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상익(黃尙翼)국민연대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 “의문사 규명은 열사들의恨푸는 첫 단추”

### 진상위원회 흥일점 민간조사관 임명순씨

“420일만에 걸친 유가족 어머니들의 노숙투쟁 등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기회인 만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서 1일 유일하게 여성 민간조사관으로 임명된 임명순(34·사진)씨의 감회는 남다르다.

89년 서울대 섬유공학과 4학년에 재학하면서 학생운동을 하던 임씨는 당시 발생한 조선대 교지편집장 이철규씨의 의문사에 유독 관심이 끌렸다. 당시 수배중이던 이씨가 불심검문에 쫓기다 수원지에서 실족사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정황을 따지고 볼 때 임씨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 이를 계기로 졸업 후 임씨는 의문사진상규명추모연대 및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그래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민주화 운동가, 의문사 피해자 등에 대해 빛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에서 민간조사관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한 임씨는 고민끝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어 생후 6개월된 아들의 양육문제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그러나 평소 ‘의문사의 본질이 타인에 의해 천부인권인 생명이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온 임씨는 ‘아이

를 임태하고 출산할때 느꼈던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며 “좁게는 내 아이와 가족을 위해, 넓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결심배경을 밝혔다. 순탄치만은 않을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임씨는 관용을 최우선의 속제로 지적했다.

임씨는 “유사 이래 법무, 행정부, 국정원, 민간단체 등이 모인 기구는 없었다”며 “다양한 층의 구성원들이 모인 만큼 서로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 집단 차원에서 화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서슬퍼런 공안정국의 한 가운데서 말없이 스러져간 열사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부채의식에도 불구하고 시기마다 현안에 쫓겨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제 첫발을 내딛는 만큼 긴장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고민구기자>

### 의문사 규명 民·官 조사관 임명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50명의 조사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명된 조사관들은 노동·인권 등 사회 운동에 참여해온 23명과 군·경찰·경찰·국정원에서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공무원 27명이다.

경찰청에서 파견된 이충호(경정)조사관은 선서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적 의의와 조사 활동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진실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법조·종교·언론계 등 인사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승현 기자

### 민간출신 사무국장 황인성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황인성(黃寅成·48·전국연합 집행위원장·사진)씨는 "역사를 바로잡는 막중한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간 출신으로 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조사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최장 9개월의 조사 기간도 다소 짧다. 그러나 목수가 연장 탕을 해서야 되겠다. 성실하고 투명한 조사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훌륭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실제 조사에 들어갔을 때 진상규명위원회에 학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했다.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17일 5일간 소양·실무교육을 했다. 조사요원들의 소명의식과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 民·官 화합 이뤄

### 역사 바로잡을 것

"위원회 구성이 복잡한 만큼 조그만 일말이 있어도 단결을 이루기 어렵다. 원칙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민간인과 공무원 출신 조사관들이 최상의 '연합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제력이 없는 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나.

"많은 장애가 있겠지만 국민의 성원이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진상 규명에 어려운 점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기관

## 80년대 용기있던 전직경관 의문死진상위 자문위원에

### ■ 전직경위 진성환씨

1일 오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 자문위원 위촉식과 조사관 임명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각계의 쟁쟁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석에 경위 출신의 평범한 전직 경찰관 진성환(61)씨가 앉아 있었다. 진씨는 영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양 위원장은 특별히 그를 가리켜 "국민의 인권을 자신의 인권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참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1980년 6월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의 서울 펄떡던 시절. 서울대 법대교수이던 양 위원



진성환씨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양승규 위원장.

### 80년 '104명 지식인서명' 수사때

### 양승규 규명위원장 구속 막아내

장은 같은 대학 경제학과 변형윤(邊衡尹) 교수가 주도한 '104명 지식인서명'에 동참했다가 서울시경 특수수사과에 연행됐다. 그 때 담당 조사관이 바로 진씨(당시 경사)였다.

진씨는 양 교수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에 서명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해야 했지만, 제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단 경찰이었지만 제 힘을 다해 구속만은 막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양 교수는 훈방됐다.

양 위원장은 "나출동만 조사받으면서 그에 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상부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당시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사적 인연'이라는 부담과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입한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용기있고 인권의식이 투철한 수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씨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회 이미지만 떨어뜨리거나 않을지..."라고 손사래를 치며 끝내 사진촬영과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자문위원회에는 최영도(崔永道) 변호사,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명예교수, 김중배(金重培)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22명이 위촉됐으며, 조사단은 경력 7년 이상의 민주화운동 경력자 22명과 검찰·경찰·군·국정원 등에서 파견된 현직 수사관 27명으로 구성됐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의문사진상규명위 본격 활동

민간 22명·공무원 27명 구성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9명의 조사관들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은 노동·인권 등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22명의 민간인과 검찰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해 온 2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에앞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시민운동, 인권, 법조, 종교, 언론 등 사회 각계의 지도적 인사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어떤 외압이나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조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경민 기자 dongack@laborw.com

# '의문사 사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진상규명위> 민간군 조사관들의 '각오'

김미선 기자 iosono@ohmynews.com



12월1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조사관 임명식 © 오마이뉴스 김미선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12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문위원 위촉 및 조사관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10년이 넘게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결실로 태어난 대통령 직속기구.

유가족들은 88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135일 농성', '10만 서명 및 국회청원',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422일간의 국회앞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2000년 7월10일 마침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을 이끌어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이 특별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과정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들은 우선 유가협에 접수됐던 44건의 의문사와, 위원회로 새롭게 접수되는 의문사 진정을 접수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12월 1일 현재 진상규명위로 공식접수된 의문사사건은 총 7건이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일선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들은 총 50명. 이중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된 민간조사관 23명을 제외한 27명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수사경력 7년 이상의 파견 조사관들이다. 의문사 사건당 조사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관 임명식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선사하고 있는 조사관들. © 오마이뉴스 김미선

그러나 이 기구의 활동에 대한 전망이 썩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의심받고 있다. 항간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두고 '적과의 동침(?)'이라는 우스개도 나온다.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과거에 의문사를 만들 어낸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군 등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대거 조사관으로 파견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위원회 활동이 2001년말로 한정돼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가장 크게 기대는 것은 '가해자들의 양심선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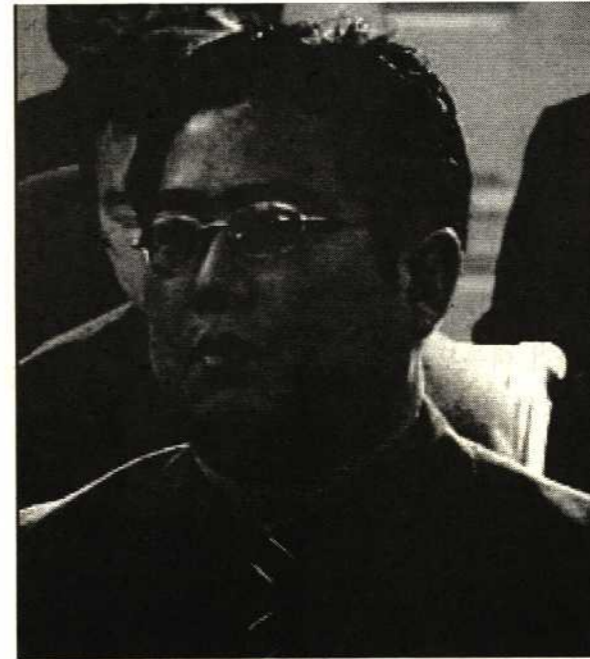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사관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강조, '역사와

국민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또 유가족들도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이번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의문사 진상규명'은 모든 밝혀지지 않은 인권 문제에 대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민간 조사관 고동균 씨와 기관파견 조사관 이 전행 씨를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전망과 각오, 우려점을 짚어봤다.

1. 민간조사관 고동균(36) 씨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증명하겠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재정국장이었다. 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7월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에 결합했다. '왜



© 오마이뉴스 김미선

다 지난 일들을 다시 들추느냐'라는 친구들의 지적에 그는 다시 한번 '확실한 진상규명'의 결의를 다진다.

- 시민단체 내에서도 '조사단'으로 가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결합하게 된 건가?

"진상규명위가 민-관의 연합 조사단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어쨌든 욕먹을 것'이란 여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국민연대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오게 됐다.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할 것이다."

- 기무사, 국정원 등의 파견조사관들이 과거 자신들의 집단에서 '자살'로 결론지었던 사건들을 이제와서 '타살'로 뒤집으려 하겠냐는 문

제인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조직에 메스를 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그건 사실 우리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원칙은 사건을 원점에서 놓고 원점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조사단은 수사, 조사에 대한 실무경험은 거의 없지만, 역대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의문사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넘친다. 반면, 파견조사단은 수사경험 면에서는 베테랑이지만 '과연 의지가 있을까'라는 외부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양측 조사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견조사관들도 이곳에 온 뒤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소명의식이 생긴다' 고들 한다"

- 파견조사관과 민간조사관간의 의견차는 어느 정도인가?

"집단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다. 파견공무원들은 사건을 간단하게 본다. 목격자, 가해자를 조사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민간조사관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유린을 증명하고, 오욕된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가해자 개인 또한 역사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재발 방지에 대한 역사적 각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조사권 제한, 사건기록 미비, 조사기간 및 조사인원 부족 등 진상규명위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이다. 대부분의 의문사 사건들이 80년대 초반 전후에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은 총 17건의 의문사 건 중에 오직 8건에 대한 수사기록만 갖고 있다. 나머지는 보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했다는 게 수사기록이 없는 이유다.

조사권과 조사기간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하려고 해도, 강제구인이 안된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동행명령장인데 동행명령에 관계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핵심가해자의 경우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요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 ‘기억 안난다’라고 주장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또한 한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길어야 9개월 뿐이기 때문에 1인당 1건 이상의 사건을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십수년동안 의문을 풀지 못한 그 사건들을 단 몇 달만에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 유가협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 민주화 과정에서의 의문사 외에 일반 의문사도 전면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맞는 말이다. 최근에도 국방부 앞에서 군폭력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시위

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개시 명령이 떨어진 사건의 유족들은 그나마 다른 의문사 사망자들보다 운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확대되고 상설화 되어야 한다.”

- 몇 건이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사건 대부분이 자, 타살의 유무를 밝혀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행위가 곳곳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고서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다.”

## 2. 이전행 운영팀장 - “가해자 양심선언, 반드시 나올 것

‘진상규명위’의 준비작업부터 함께 했던 이전행(42) 운영팀장. 그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소속으로 지난 5월22일 이곳으로 파견됐다. 어떻게 오게된 것이냐고 물으니 ‘지원자가 많아 9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며 웃는다. 사실 이 씨를 포함한 기관파견 조사관들은 지원자가 없어 차출된 경우다.

- 처음에 ‘진상규명위’에 왔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어리둥절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 단체를 한군데도 알고 있지 못했다. 때문에 처음엔 법, 의문사 등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유가족들의 고통, 삶을 폭넓게 이해하게 됐다.”



© 오마이뉴스 김미선

기관파견 조사관들의 경우, 자신들의 조직이 곧 가해자(추정)인 경우가 많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런 지적도 맞다. 나도 처음엔 민간조사관을 늘리고, 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대로 군관련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우리군이 조사하고 결론지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 곳에 온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엄선된 사람들이다. 군기관도 잘못된 역사가 있었다면,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간조사관 중에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다. 한때는 ‘검거해야 할 적(?)’이었을 민간조사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웃으며)사실 처음엔 민간조사관과 파견조사관들이 밥도 따로 먹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서로 섞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지금은 서로 잘 지내고 있다. 연합으로 조사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진상규명위 활동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가협의 경우, 현재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사실 ‘대통령 직속’은 말만이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얼마나 해결의지와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강제조사권 부여, 조사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민주화’ 단서를 빼고, 전 의문사로 조사대상을 넓힐 필요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진상규명위 활동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접수된 의문사들의 자·타살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분명히 가해자들의 ‘양심선언’ 제보가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다. 과거에는 조직체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아닌가. 또 법의학자, 각종 문헌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Faded text]

# 기고 및 기타 관련 보도